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급식 차질 우려

집단 임금협상 중단 여파...20일 1500명 상경 투쟁 시·도교육청 비상체제 돌입...급식 공백 최소 총력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집단임금 교섭 결렬로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해야 하고, 늘봄교실과 유치원 등 돌봄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저임금 구조 철폐와 임금 격차 해소

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6시간의 본교섭이 결렬되면서 임금·복지 협상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서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258개 학교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71개 학교에서 정상 급식을 운영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본격 파업 전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

인 약 50%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담사·실무사·강사 등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수가 적고,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한국노총 소속으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광주 500여명, 전남 1000여명이 상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초급·명절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개선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교육 당국은 △기초급 7만2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예산 한계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연대회의는 “수차례 집단교섭에도 교육 당국이 요구를 외면해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확보, 저임금 구조 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신학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동시 총파업에 대비해 종합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며 대응

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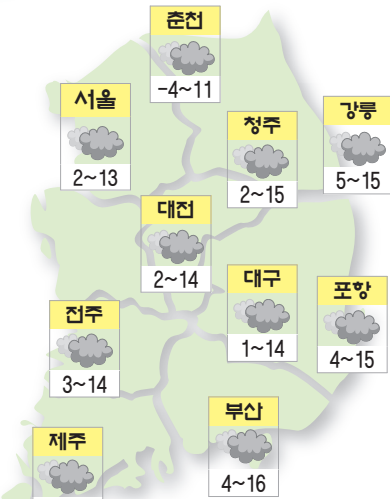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본부장으 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급식·늘봄·특수·유아교육 등 학생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전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본청과 전 교육지원청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별 맞춤 대응책을 수립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노사 갈등의 희생양이 되서는 안 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12	달달	07:08
☀️	예보	17:24	달달	17:00



광주	☁️	4~14
목포	☁️	6~14
여수	☁️	6~14
순천	☁️	3~14
구례	☁️	2~13
광주	☁️	2~15
◡	◡	◡
전남	☁️	5~16
◡	◡	◡
전남	☁️	9~15
◡	◡	◡
전남	☁️	1~15
◡	◡	◡
전남	☁️	6~14

목포	밀물(고)	01:41 / 14:27
	썰물(저)	07:02 / 19:42
여수	밀물(고)	09:06 / 20:56
	썰물(저)	02:23 / 15:08

새벽 차량털이로 흠친 카드 사용 20대 남성 영장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흠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은 타인의 차량에서 물품을 흠친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절도)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급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신용카드 등을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흠친 카드를 이용해 숙박 비용 등 수십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17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지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시민 향한 경찰 수사 당장 멈춰야” 5·18기념재단 성명 “정당 방어·민주시민 권리행사”

5·18기념재단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저지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광주시민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배를 막아선 시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시 신고 없이 기자회견 형태의 집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장 대표 측이 보낸 조화를 넘여뜨려 부순 시민에게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재단은 “1980년 계엄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오월 영령 앞에 2024년 계엄을 옹호한 당의 대표가 참배하고 조화를 바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위

다”며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정당한 방어이며, 민주시민의 권리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광주시민과 시민단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광주시민을 적대시하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지역 정치권 등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민을 가장한 과격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5·18 정신을 왜곡하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장 대표의 참배를 막아선 시민들을 향해 ‘과격단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당 지도부 참배를 가로막은 ‘광주시민’을 가장한 일부 과격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5·18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공명 드시고 힘내세요” 19일 광주 서구 농성광장에서 열린 농성2돌 마을축제에서 고요순 농성2돌 주민자치회장과 최선화 동장 및 주민자치회원들이 여려신들에게 공명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준비한 공명 500인분은 나주공명 하안점 윤안점 김장선 대표가 후원했다. 나주공명 하안점 윤안점은 매일 점심사 무료급식소에 공명 300인분,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공명 200인분을 전달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공청회 두고 유족들 ‘반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유족과 협의없이 강행...활동 중단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유가족들이 ‘독단적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1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오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4개 분야를 주제로 사조위 위원과 조사관, 각 분야 전문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항공사,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항철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던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공표 예정인 ‘행’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사조위의 독단적인 공청회 강행을 비판, 앞으로 일체의 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역량 부실, 인력 및 예산 부족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면서 “정보 비공개, 일방적인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 증거를 방치, 현장 사진 촬영 금지 등 공정성 측면에서도 피해 당

사자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철위가 사전 정보 공개 없이, 공청회 일정, 내용, 참석자 등에 대한 유가족과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점의 결정판임을 천명한 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 강행은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단언한다”며 “항철위가 독립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공청회, 중간보고 등 일체의 조사 활동을 즉시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사 증축공사 착수

총 386억원 투입...1만779㎡ 규모로 2배 확장 2028년 준공 목표...하루 3만7000명 수용 기대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사 증축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착수 안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운행선 인접 공사에 따른 단계별 시공 방안, 여객통로 확보, 임시 안전시설 설치 등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

하고,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의견(VOC)을 수렴해 착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조기 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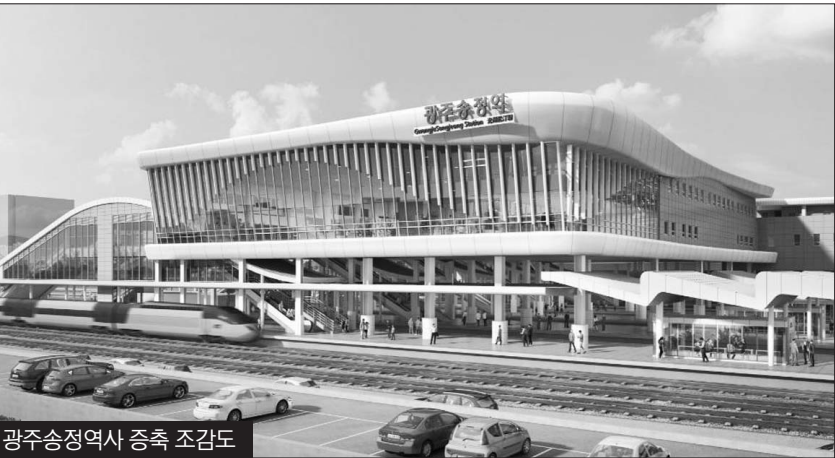
광주송정역사 증축 공사는 사업비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발주 시기를 고려한 노임단가 조정 등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해 참여 여건을 보완했으며, 그 결과 ㈜신세계토건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 10월 공사 계약을 완

료했다.

이번 증축 공사는 2030년 기준 하루 이용객 약 3만7000명의 이용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386억원을 투입해 기존 연면적 5755㎡ 규모의 지상 4층 선상역사를 1만779㎡ 규모로 두 배 가까이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이용객들이 이동하는 통로 및 대합실 공간인 콘코스를 확장하고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역사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열차가 운행 중인 역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인 만큼 열차 승차 위치 조정, 공사 구역 분리, 야간 차단 작업 실시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용객 불편



광주송정역사 증축 조감도

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자동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BIM 기술을 활용해 공사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된 준공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목포서 올해 ‘첫 눈’ 평년보다 10일 빨라

전남 목포에서 올해 첫 눈이 관측됐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위가 이어지면서 이날 목포에서 첫 눈이 내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24일, 평년보다는 10일 빠른 수준이다.

이번 추위는 20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주춤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 기온(아침 최저기온 0~7도, 낮 최고기온 12~15도)보다 높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전남 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면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